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역의 활성화



김경량 학장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한국농촌관광학회장)

1. 시작하는 말

최근 도농상생은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말은 일견 도시와 농촌이 다 같이 잘되기 위해 협조하자는 의도로 내건, 상생의 의미를 담아 낸 표어다. 이때의 상생은 도농교류를 통한 시너지창출이라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서로에 대한 애뜻함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도농교류(Urban-Rural Interchange)란 상호 대등·호혜의 원칙하에 도시와 농촌간에 무엇인가를 교환 또는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주고받는 행위의 주체는 누구이며, 그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교류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도농교류의 주체는 도시민과 농촌주민이며, 교류되는 대상은 사람, 상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 다양하다. 따라서 '도농교류'란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뿐만 아니라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인간적인 신뢰를 중심으로 한 사람, 상품, 정보의 교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양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인에게는 먹을거리, 볼거리, 쉴거리 제공 등을 통한 농외소득 향상과 지역사회유지가 목적인 반면, 소비자인 도시민에게는 다른 일반 관광에 비해 농촌의 특성이 담기고 상대적으로 체험만족도가 높을 때 지속적인 방문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호역할 못지않게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즉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도시민에게는 체험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농업인과 도시민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호의견을 경청해 주는 자세가 준비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역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고, 농촌지역을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농어촌 지역의 주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농촌정책과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의 틀 안에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농림부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단위사업 이외에 2007년부터 지자체가 구상하

는 도시민 유치계획을 공모를 통해 선정, 일정 예산을 지원하는 '도시민 유치대책' 사업을 신설하였고, 행정자치부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적인 변화를 감안할 때, 도시는 농촌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동반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 농촌사회도 이에 어울리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마을 단위부터 농촌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빈곤을 근절하고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혁신역량 강화와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농촌지역 사회유지 및 발전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정보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2. 왜 도농교류인가?

가. 굶아기는 지역문제 : 도농격차

우리 사회는 지난 30여 년간의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농촌지역사회는 많은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인구는 1970년대 초 최고 수준을 기록한 후 감소하기 시작했고 88올림픽을 계기로 지금까지 젊은 층 인구가 대부분 빠져나가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신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강원도의 경우 1970년 2.7%에서 2006년 13.3%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고령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 개발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부 농촌마을에서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이 30%를 넘고 있어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10년 이내로 붕괴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 농촌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여정이 고달프기만 하다.

균형발전을 앞세우고 대대적인 정책수단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들도 소득 수준이나 삶의 질, 지역 산업 수준, 인적·물적 자원 규모에서 대도시들에 크게 밀리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우수한 내용이 없다보니 인재들이 찾아올 만한 변변한 기업 하나 없다.

지역의 경쟁력이 약하면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쟁력도 떨어진다. 자연히 경제 규모도 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나마 남은 젊은 인력들은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가려 한다. 인구 감소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이 집중돼 있는 대도시들에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주어지는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력 발굴의 의미를 되새긴다.

최근 일부 농촌학교 교사들의 비정상적인 경쟁행태와 무성의한 교육자세가 지탄을 받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의 도서벽지 근무교사에게 주던 가산점제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복식수업과 상치과목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농촌교사들에 대한 보상과 배려마저 없애려는 어리석음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외쳐오던 '농어촌교육 활성화'가 달성된 것도 아니고, 가산점제를 대신할 교사들의 농촌학교 유인책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산점제가 폐지되면 사명감과 소신만으로 여건이 열악한 농촌학교를 자청할 교사가 얼마나 될까. 이는 자칫 농촌교사의 도시 탈출을 부르고, 경험과 실력있는 교사의 농촌학교 유입을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젊은 농업인이 농촌을 떠나는 주원인의

하나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학생이 줄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교사마저 빠져 나간다면 농촌 교육은 실종되고 만다. 농촌교육이 살아나지 않는 한 정부가 외치는 지역균형 발전과 도·농격차 해소 또한 공염불이나 다름없다.

다른 측면에서 지역인재선발을 책임지어야 할 지역의 대학들이 정원 확보에만 급급해 지역의 동력이 되어야 할 지역인재 선발, 양성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입시 때마다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자 지원 자격 기준을 하향조정하거나 아예 없애고 있다.

대학 정원이 수험생을 초과하는 대입정원 역전현상이 빚어지고 대학마다 정원 채우기에 사활을 걸면서 나타난 결과다. 한때 지역사회의 중심체로서 우수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던 대학이 이젠 마구잡이식으로 신입생 유치에 나서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대학의 고유사명인 지역인재 양성이 소홀하게 되는 점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지역대학이 지금과 같이 지역인재의 육성과 관계 없이 백화점식 경영형태로는 더 이상 존립이 어렵다. 지역대학은 지역에 부합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목표를 재조정하고 자생력을 높이며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나. 심화되는 농촌내부의 문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농촌사회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동안 자본주의의 빈부 격차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도·농 간의 격차는 사회 문제로 중시돼 왔지만 농촌 내부의 양극화 문제는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농촌사회의 양극화는 계층 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고질적 병폐로 이어

질 것이며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저해한다. 지속적인 개방화에 따른 피해 대책과 농촌지역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문별로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며, 노령화된 농촌의 빈곤계층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대농, 전업농 중심의 맞춤형 농정도 다시금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또 다른 요소로 농촌 내부의 역량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농촌지역 활성화의 한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농촌관광의 경우 농촌주민의 생각과 눈높이로 시설을 만들고 난 후 어떻게 도시민이 오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패의 시작이다.

농촌마을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국내외의 크고 작은 관광지를 다녀보고 여행한 매우 까다로운 소비자들이다. 농촌지역사회가 활기가 넘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일 때 도시민들도 참여하고 싶어 것이다.

우리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오고,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전시적인 행정의 행태도 비판받아야 한다. 단기적인 실적에 급급해 하지 않고, 적은 숫자가 오더라도 꾸준히 그들이 **ㅏ**을 수 있고 마음을 열고 교류하는 환경조성이 부족한 것이 우리 농촌관광의 현실이다.

도시의 소비자들이 농촌지역을 찾을 때 그들이 진정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필요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아마도 그들이 농촌마을로 온 까닭은 농촌다운 자연과 문화를 느끼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도시 소비자들이 농촌과 자연이 갖는 특성과 문화, 분위기에 빠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농촌의 여건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농촌지역의 역량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3.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활성화 : 조직화

농촌지역사회가 활성화되려면 장기적으로 지금 까지와는 달리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상향식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외 성공사례를 보면, 민간이 주도가 돼서 행정이 돕던지 행정이 주도가 돼서 민간이 따라가던지 성공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있다. 즉 농촌개발의 시작부터 시행까지 주민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는 타의에 의한 동원식의 참여로는 지역의 잠재력을 지역 활성화의 동력으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수마을로 등장되는 지역의 공통적인 사항은 유능한 지역리더를 중심으로 주민이 잘 조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활성화의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마을공동사업 추진시 편익 향유의 측면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편익으로는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의 활력 증대, 산업구조 다각화에 따른 주민 소득의 증대, 물리적 생활환경 개선,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편익을 향유하는 대상은 바로 현지 주민이어야 하며, 이러한 편익 향유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이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그 지역의 자원이 지속가능한 상태로 가꾸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감시함으로써 주민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자원의 최적 활용 측면에서 반드시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마을공동사업은 지역이 가진 무형적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역이 가진 자연·역사·문화 등의 자원과 더불어 최대의 자원

은 바로 인적자원일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최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참여가 전제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역의 잠재된 자연, 역사, 문화 등의 자원을 상품으로 발굴,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야말로 그 지역의 잠재자원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추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간의 공적투자사업들에서도 나타나듯이 주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물리적 시설만을 정비한다면 그 시설이 결코 제대로 유지되고 관리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주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 프로그램은 예산적 뒷받침이나 계기가 사라짐과 함께 지속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사업추진에서의 물리적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소프트한 프로그램의 지속성 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재정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정부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부족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기대하는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 전체의 입장에서 사업을 기획, 실행, 평가하는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 마을별로 주민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의향조사 및 분석을 통해 공동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마을의 조직화를 위한 기존 주민들의 조직체계 검토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농촌지역의 자율적 혁신역량 강화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마을자원을 묶는 무형의 관계적 자본, 즉 사회적 자본의 축

적이 중요하다. 사회적 자원은 지속적인 혁신과 학습을 가능케 하며, 공동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나 역량강화를 단지 사회적 자본에만 한정해서 볼 수는 없는데, 이는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이나 재원의 한계 등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역량 강화의 대상에는 대상지역에 사는 지역주민 개인과 집단, 그리고 그를 지원하는 기관도 포함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개인적 역량의 강화가 아니라 집합적 역량의 강화라는 점인데, 이는 집합적 역량의 강화가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리더 및 주민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여 계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농촌지역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장수군의 「농촌발전기획단」과 함양군의 「100+100혁신운동」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리더 및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잠재적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그들이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 스스로의 계획수립, 사업실시, 평가를 통한 상호식 민주적 의사결정과 주민참여, 파트너십과 집합적 학습행동, 풀뿌리 리더십의 배양을 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지역리더와 주민의 합리적 사고능력, 창의적 발상능력, 기획능력, 조직능력, 헌신성 등의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 접근으로 다년간의 사업기간을 설정해야 하고, 사회·경제·문화·환경의 통합적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종합적으

로 접근하여야 하며, 농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지역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가령, 금산군은 다락원을 건립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효과를 내고 있으며,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농촌지역의 역량강화는 리더 및 리더십 개발·양성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학습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한층 배가될 수 있다. 즉, 혁신역량배양은 누적적으로 역량이 발전되는 과정으로 연속적인 소규모 사업을 통해 실천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우리 사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정성은 지극하다. 지난 20년 전만해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피상적 의미만을 지녔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여성이나 노령층의 취업은 특별한 일이었다. 하지만 10년 전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우리 사회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일할 수 있는 누구나 성별, 연령을 가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선진국형 사회로 바뀌고 있다. 주부들도 전업주부라는 용어가 쑥스러울 정도이다. 해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별로 기업 유치에 전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신년사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올해도 지자체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많은 청사진이 제시됐으나 나타난 결과는 그 계획을 믿기엔 역부족이다. 이미 지역단위에서 지역 경기를 주도할 주력산업이나 특화산업 가릴 것 없이 모든 업종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사회에 널리있고 지역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일시적 생색 내기용이었을 뿐 근본적인 고용창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일감창기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이지 못하며 전시성이고 일회성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지역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되지만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지역내의 고용기회를 늘리고 소득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 공장이나 택지 개발, 관광산업 활성화 등 그것을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가공품 개발과 관광산업까지 연계하는 방식이 가장 전형적인 농촌지역 활성화의 수법일 것이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농촌축제도 그중 하나의 방편이 된다. 평창군 봉평면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효석문화제 개최를 통해 많은 수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보성군에서는 농업경영체들이 중심이 되어 농업과 더불어 관련 일자리의 소득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촌지역 사회유지 및 발전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농업인 리더들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고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여, 연중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우리의 농촌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또한 농촌사회의 조직화 및 공동사업을 통한 마을의 조직화 및 단결력을 결속시키고, 마을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역할을 분담하여 이에 따른 보상을 받는 책임사회를 구현하며, 마을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경제적 유인책을 통하여 마을단위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동기 부여를 중시한다.

지역과 연계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은 농촌마을과 지자체, 농협간의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일들에 대하여 접근해 볼 수 있다. 우선 공동사업을 통한 마을 단결력 결속사업으로는 마을 가로수 심기, 마을수로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독일의 농기계은행(Maschinenring)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겨울철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를 이용한 마을공동제설작업, 간선도로 정비사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농한기철 마을공동 소득마련으로 지역 내 산림관리, 소규모 저수지 관리, 간단한 관내토목공사 등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넷째, 마을에 대한 애향심 고취로 마을 환경정비, 마을쉼터 조성, 마을 가로수 심기, 간선 도로 정비, 산불감시 등의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초지자체 및 농협 등 지역관련 기관과 마을간의 협약을 통해 기존의 자체 행정체계 내에서 시행되던 사업들을 마을에 양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마을에 지불해야 한다. 또한 명확한 사업의 내용과 분량 및 비용, 책임한도 등도 정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기초지자체 및 농협 등 지역관련기관은 관내 마을조직, 또는 작목반 등 기존 조직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위에서 예시한 사업 등을 공고하고 선정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 선정기준과 협약조건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일본,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지자체 및 지역관련기관과 마을간의 협약을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확산시켜 마을단위의 조직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예산은 기존 기초지자체 및 지역관련기관의 관련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활용하며, 농촌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우수 사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라. 농촌 정보화를 통한 거래비용 감소

농촌지역이 과거 단순한 생산공간에서 생산·정주·휴양공간으로 그 가치가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정보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정부는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지역에 초고속 통신망을 95% 수준까지 구축하였고, 모든 읍·면·동 지역에 9천 개의 정보이용시설을 신설, 취약계층에게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계층 간·세대 간·지역 간 정보 격차는 상존하고 있으며, 부처 간 상호업무협력체계가 미흡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농촌 정보화를 위해 먼저 준비할 것은 정보화에 대한 기반과 함께 정보화를 통하지 않으면 이제는 생업이 어려워진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하드웨어 보급에만 집중하지 말고 체계적인 교육과 농업인들에게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동기부여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인 자신들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었다는 생각보다는 정보화를 통해 정말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얻으려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가령 농촌관광의 공급자인 농업인과 수요자인 도시민간의 정보가 쉽게 유통될 수 있어야 상호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농촌관광 상품이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 낮은 거래비용으로 농촌관광 상품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정보를 입수하며, 예약 또한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정보유통과 함께 신속하고 편리한 대금결제방식, 예약 및 환불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4. 맺는말

도농상생의 분위기가 우리 농촌사회의 새로운 변

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농촌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도시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하여야 하고, 농촌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비로소 지역의 자연이 살고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거창한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생활문화를 즐기는 사람과 마을, 문화가 만들어지면 도시민은 저절로 오고 신뢰가 구축되는 가운데 도농상생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도시민과 상생하는 농촌으로의 변화는 전적으로 선진화된 행정의 도움 속에 농촌주민들의 변화의지에 달려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잘 사는 지역,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각 주체별로 앞장서서 바꾼다면 대한민국 농촌은 성공적인 선진국 농촌으로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농촌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마다 확실히 알 수 있다. 농촌사회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도시민들에 대한 새로운 교육도 중요하다. 도농상생의 주체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찾아 나설 때 우리 도시와 농촌에도 희망이 보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난 10여 년 전부터 지역농정과 농업인단체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중앙과 지역을 불문하고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는 행정과 소비자단체, 농촌주민, 지역기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높게 형성돼 있다. 자기 조직만의 논리를 앞세우고 타 주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도농상생을 통해 선진국형 농촌사회를 창출해야 하는 한국농촌에서 이러한 도농교류의 주체들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와 서로가 상생하는 유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도농상생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